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4년 12월 17일(수) 10:00
담당자	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장 (044-550-4045, yoogj@kdi.re.kr)
배포일시	2014년 12월 17(수) 08:3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KDI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구조개혁;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?

- 일 시: 2014년 12월 17일(수) 10:00~12:00
- 장 소: 은행회관 국제회의실(2F)
- 주 최: KDI

□ KDI는 12월 17일 '노동시장 구조개혁;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?'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,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모색함.

-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또 다른 사회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.
- 효과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노동시장의 역할 등 핵심 현안 및 정책 과제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요구됨.

□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“노동시장구조개선, 어떻게 할 것인가?”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

- “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증대는 없으며,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, 서비스업의 인재 투입 위해 노동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을 개발해야 할 것”이라며,
- “고용노동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만능주의를 탈피해 고용문제와 세제, 금융, 정부조달 등과의 연계성 강화, 고용문제 해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, 취약근로계층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인센티브, 거버넌스,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함.

□ 윤희숙 KDI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“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: 왜, 무엇을, 어떻게?” 제하의 주제발표에서

- “고속성장기를 품어왔던 노동시장 작동원리는 글로벌 경쟁의 요구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나,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주무부처의 뚜렷한 방향성과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해 역량을 집중해야 진전시킬 수 있는 고난도의 과제”라며,
- “과보호된 부문을 주로 대표하는 노사의 협상에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보호가 절실한 계층이 배제될 위험이 높다”고 주장함.

□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,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장,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, 윤희숙 KDI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,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,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,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,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,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
❖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
09:30~10:00	등 록
10:00~10:10	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
10:10~10:50	발 표 1. 노동시장구조개선, 어떻게 할 것인가?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발 표 2. 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: 왜, 무엇을, 어떻게? 윤희숙 KDI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
10:50~12:00	종합 토론 사 회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장 토 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

발표 1. 노동시장구조개선, 어떻게 할 것인가?

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

1. 문제 제기

□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함.

- 대기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 특정 이슈에 집착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, 고령화에 대응하도록 노동력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둬.
- 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증대는 없으며,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인재 투입 위해 노동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 개발이 필수
 - 고용노동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서 탈피,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, 거버넌스, 재정 지원의 적극 활용
 - 고용문제와 세제, 금융, 정부조달 등과의 연계성 강화, 고용문제해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, 취약근로계층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

2.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철학과 방향

□ 노동시장의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철학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함.

- 인본자본주의 추구: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사람의 역할을 중시하고 사람의 행복에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경제체제 지향

- 고용임금결정에 생산성과 공정성 원리 추구, 생산성과 공정성제고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중시
- 대기업·중소기업과 제조업·서비스업의 균형 지향, 대기업·정규직의 양보와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, 비정규직의 역량제고 추구

3.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

□ 대기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견인 역할, 대기업이 고용노동혁신과 공정노동의 확립에 소극적인 경우 노사의 공동 책임

- 고용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통한 단위노동비용 절감, 근로자의 성실 근로의무 이행, 경영자의 정당한 징계권 존중
 - 불공정한 비정규직·간접고용 자제 위해 고용보험제도 개선, 공정노동기준과 정부조달자격의 연계,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 폐지,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가입허용,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 강화

□ 노동시장 구조개선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질 개선이 필수적이며, 이를 위해 중소기업 노사의 미래 기업 가치 공유, 인재 확보 경쟁력 제고 중점 지원

- 유망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제와 다른 종업원 주주제도 도입, 중소기업이 졸업 전에 장학생으로 우수인재 확보할 수 있는 학습근로제 도입
-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고용의 질 제고 유인 위해 재정금융지원사업과 정부조달사업을 활용, 중소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사협의회와 주거래은행제도 활용

-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고용의 질 제고, 이를 위해 권역별 유망 서비스업 발굴,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, 서비스업 고용에 관련된 정책 인프라 강화
 - 서비스업의 IT투자 지원, 선진국의 서비스업 동향 정보 제공, 이업종 지식·경험 융합 지원 통한 생산성과 부가가치 제고.
 -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별 유망 서비스업 발굴 및 지원, 정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과 평가 및 지원

- 자영업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함.
 -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망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, 자영업 창업자의 성공을 위한 지원, 자영업자의 전업지원

- 외국 인력에 대한 레비(분담금)도입 및 영주 자격 부여, 분담금으로 인력개발기금조성, 취약근로계층의 직업교육훈련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투입

- 청년의 조기 취업 유인과 졸업 전 직업능력향상 유인, 고졸·대졸 신입사원의 임금격차 축소 위해 과도하게 임금이 높은 사업장 고용세 부과, 학습근로제 도입

- 여성 고용 촉진의 실효성 제고, 여성지원제도의 혜택을 비 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게 우선제공, 세제 혜택은 맞벌이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많이 수혜

- 베이비부머 및 고령층의 고용문제 해결 위해 퇴직 전 임금피크대상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이수,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컨설팅, 퇴직자의 지식·경험을 지역 경제활동에 투입

- 임금체계를 고용안정·생산성제고 유인하도록 호봉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, 성과공유제 도입, 고정급(수당) 대비 변동급(성과급)의 세제 우대
 - 저소득가구의 임금소득 제고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, 국세청과 금융기관과의 협조 통한 체불임금과 임금미지급문제 발생 억제
 - 최저임금제의 개편, 지역별 차등 허용, 정부의 사업단가와 최저임금과의 분리

- 노동시장의 체력인 생산성향상을 위한 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.
 - 노사정의 생산성 향상협약체결 및 상시 점검, 국민 누구나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지원

- 노사관계는 고용안정과 고생산성-고임금체제 구축의 핵심 요소
 - 노사의 생산성 협약 체결, 단위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일터혁신과 단체협약개선, 비정규직 차별 배제를 위한 노조규약 개선

-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보강 및 상시 운영체제, 공정노동 기준 제정,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면제 결정기구의 노사정위원회 소속, 본 회의 정례화
 - 노동위원회의 공정노동위원회로 개편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동 정책 역량 강화

발표 2. 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: 왜, 무엇을, 어떻게?

윤희숙 KDI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

1.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

- 고속성장기를 풍미했던 노동시장 작동원리는 글로벌 경쟁의 요구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경제와 산업, 기업, 개인의 적응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 재설계될 필요
 - 세계화와 기술발전, 서비스화 등의 도전에 직면한 선진 외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.
 - 고속성장기 우수노동력을 확보하고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충성심을 끌어냈던 연공임금제나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은 기업과 개인의 이동성과 적응능력 제고를 저해
 - 청년실업 심화와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과보호되는 좋은 일자리와 대비되어 사회적 갈등을 심화

2.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

- 사회적 보호 미흡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두려움과 경직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재정투입이 필요
 - 한국은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정책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순차적으로 공급한 결과, 이들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음으로써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공적이라 평가되어 왔음.

- 고속성장기에는 대부분 상향이동에 성공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진입에 실패한 노동력의 패자부활 지원의 필요가 크지 않았고, 그 결과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가 상존
-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, 서비스화와 함께 근로빈곤과 미취업 빈곤의 문제가 심화하면서 ‘고용과 직업능력개발, 생계유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’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필요 증가

3.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추진체계 필요

- 다양한 수준과 영역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
 - 임금, 해고, 근로시간, 업무배치 등 기능적·수량적 경직성은 과보호된 일부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, 다양한 차원에서 법규정과 기존 관행이 결합해 고착화
 -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을 개선하는 거시적 노력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적 사례를 통해 노사의 자율적 협약을 지원하는 미시적 노력이 필요
 - 그러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법규정(예: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)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을 입법부와 공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
 - 행정부는 입법화 노력의 국회통과가 난망하다는 이유로 각종 지침을 통한 노동시장 관행 개선에 치중했으나, 사법부 판례로 그 내용이 종종 기각되면서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통상임금 문제 등 복잡성을 키워왔음.

□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중장기적 전략과 추진체계를 우선 정비하되, 주무부처가 내용을 주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체계가 바람직

- 주무부처의 주도 하에 '실업급여와 훈련지원 등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입, 사업장별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노력, 공공부문 유연화와 정보인프라 강화, 고용복지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필요
- 과보호된 일부 부문을 주로 대변하는 노사의 협상에 노동시장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이해가 배제될 위험이 높으므로, 방향성과 정부 추진안을 마련한 후 노사 합의를 유도할 필요